
II. 선행연구의 개관

1. 은퇴의 정의

-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은퇴에 대한 정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함(권문일 1996; 윤재호·김현정 2010; 전상민 2011).
 - 첫째, 특정 연령대 이상(55세, 60세, 65세 등)을 은퇴자로 정의(여운경 2002)함.
 - 둘째, 노동시장 관련 지표를 설정하여 특히, 임금수준이나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두 지표 중 하나가 일정 수준 이하로 급격히 축소되는 시점을 은퇴로 정의함(윤재호·김현정 2010; 강성호·전승훈·임병인 2009; Burtles and Moffitt 1984).
 - 셋째, 노동시장에서 가장 오랫동안 근무했던 주 직장을 그만두는 시점 이후를 은퇴기간으로 정의함(석상훈·장선구 2009).
 - 넷째, 퇴직연금 등 연금수급에 따라 은퇴를 정의할 수 있음(장인협·최성재 1993).
 - 다섯째,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로 은퇴를 정의하는데 은퇴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답할 경우임(안중범·전승훈 2004; Parnes 1975).
- 은퇴에 대한 정의가 다양한 것은 사용자료 상의 특성 내지 한계에 주로 기인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은퇴에 대한 직접적인 설문문항을 이용하여 은퇴가구를 정의함.

- KREIS에서는 은퇴를 “생계를 목적으로 근로 및 소득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자리를 더 이상 찾지 않고 있으며 찾을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로 정의하고 이를 설문문항에 반영함.
 - 이 정의에 따라 먼저 조사시점에 비취업자를 대상으로 이들에게 “만 15세 이후 근로 및 소득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묻고, 이에 대해 근로 및 소득활동의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개인에 대해 다시 “현재 귀하는 은퇴하셨습니까?”라고 질문하고 은퇴상태에 있는 개인을 은퇴자로 정의함.
- 이 방법은 노동시장에서의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주된 경제활동참여 여부를 적절하게 고려되기 때문에 은퇴와 관련된 실태 분석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음(안종범 · 전승훈 2004; 김지경 2005, 이승렬 · 조수기 2008; 백은영 2008 등).

■ 위에서 간략히 소개한 은퇴의 정의와 관련하여 좀 더 살펴보면 특정 연령대 이상을 은퇴자로 판별하는 첫 번째 방식은 분석대상자의 객관적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원종욱 2000; 전승훈 · 강성호 · 임병인 2009 등).

- 간단하게 은퇴자를 판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 방법은 분석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를 요하게 됨.
 - 연령¹⁾을 기준으로 은퇴자를 판별한다는 것은 고령자와 은퇴자가 동일하다는 인식이 성립하지만 우리나라 중 · 고령자 대상의 연구와 은퇴자 대상의 연구결과는 이들 계층의 소득구조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함.
- 근로 및 사업소득이 없는 완전 은퇴가구의 경우에는 이들 연령집단 중에

1) 은퇴자로 판별하는 연령으로는 연구자에 따라 55세, 60세, 또는 65세의 연령기준이 사용되며, 이를 판별하는 기준은 관련법에 따른 것으로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는 고령자를 55세 이상~64세 미만으로 정의함. 참고로 국민연금법에서는 완전노령연금의 수급 시기를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보험피보험자를 64세 이하로 정하였지만 60세 이상 재취업자는 제외하고 있음.

서 일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가구주의 특정 연령을 근거로 은퇴자를 정의할 경우 은퇴자를 과대추정하는 문제가 있으며, 또한 특정 연령대 이상만을 대상으로 선별하기 때문에 조기퇴직이나 명예퇴직의 문제 등은 고려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 특정 연령대이면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로 은퇴를 정의할 경우 일시적 실업상태도 은퇴로 간주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됨.

■ 은퇴를 정의한 두 번째 방식은 앞서 제기한 바대로 노동시간이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이들이 일정수준 이하로 급격히 감소할 경우 은퇴를 구분함.

- 노동시간이나 임금 기준은 연구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연간 1,000시간 미만 또는 연간 1,200시간 미만(Gustman and Steinmeier 2000)의 노동시간을 갖는 사람을 은퇴자로 보는 경우도 있고, 주당 30시간 미만(Burtless and Moffitt 1985) 또는 주당 25시간 미만(Gustman and Steinmeier 2000) 일하는 자를 은퇴자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음.

- 국내의 경우 윤재호·김현정(2010)과 강성호·전승훈·임병인(2009)은 주당 30시간 미만인 경우를 은퇴의 경우로 간주하고 분석함.

- 또한 Gustman and Steinmeier(2000)는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최고급여 수준의 60% 미만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를 은퇴자로 정의하기도 함.

- 한편, 이와 같이 연구자에 의해 사전에 설정된 근로시간 내지 임금수준을 이용한 은퇴정의는 직접 설문조사에 의한 은퇴의 정의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지고 실제 은퇴상황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제기됨.

■ 은퇴에 대한 또 다른 기준으로 10년 또는 20년 이상 일한 주 일자리에서 그만두는 경우를 은퇴로 정의하기도 함(신동균 2009; 우석진 2010 등).

- 이러한 은퇴의 정의는 은퇴를 노동시장의 경험이나 현재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설정하는 장점이 있으나 10년이나 20년이라는 제약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근속경험이 취약한 계층은 표본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 한편 공적연금 수급여부에 따라 은퇴자를 판별하는 방법 또한 은퇴자를 판별하는 간단한 방법임.

-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에서는 공적연금 수급대상자를 은퇴자로 판별하게 되면 대부분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이나 일부 국민연금에서 특례노령연금수급자나 조기노령연금수급자만을 포함함.
- 특정 연령집단이나 퇴직자군의 특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은퇴자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결국 이와 같이 연구자에 따라 은퇴의 정의는 다양하게 존재하여 정의된 은퇴에 따라 분석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음.

- Gustman and Steimeier(2000)는 Health Retirement Study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은퇴의 정의에 따라 은퇴자 비율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남을 보였음.

– 본인의 신고에 따른 은퇴자 비율은 1차년도에 12.3%였으나 시간급과 주급으로 정의한 경우의 은퇴자 비율은 32.3%에 달해 20% point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2. 은퇴와 소비, 자산 간 관계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더불어 조기퇴직의 확산으로 은퇴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학계는 물론 관련 업계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임.

■ 국내 은퇴관련 연구를 주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은퇴결정에 대한 연구(김지경 2004, 2005; 안중범·전승훈 2004; 손종철

2009 등), 은퇴 이후의 소득원에 대한 연구(김수완·조유미 2005 등), 은퇴 시에 필요한 적정 소득 대체율에 대한 연구(원종욱 2000; 여운경 2002; 안종범·전승훈 2005; 백은영 2008 등), 은퇴자산의 충분성에 대한 연구(여운경·김진호 2005; 백은영 2008 등), 그리고 은퇴 전후의 소비변화에 관한 연구(안종범·전승훈 2004; 석상훈·장선구 2009; 전상민 2011 등)가 있음.

– 대부분의 연구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증대하는 노인의 건강에 대한 우려와 은퇴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음.

– 은퇴 이후의 건강악화는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를 억제하는 동시에 고령자의 치료와 휴양의 부담이 개인과 가계 그리고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은퇴 이후의 건강상태의 변화가 중요한 연구과제로 제기됨.

– 손용진(2005)은 한국노동패널조사의 2003년 자료를 이용하여 은퇴를 한 집단이 2년 전과 비교하여 건강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승하였음을 보고하였고, 이승렬(2007)은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우 은퇴할 확률이 높게 나타남을 보고함.

– 석상훈(2010)은 KReIS 자료를 이용하여 중고령자의 은퇴와 건강상태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은퇴자의 약 40% 이상이 건강상의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나오고 있으며 은퇴가 건강에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음.

■ 다음에서는 은퇴관련 연구를 본 연구에서 관심이 있는 소비와 자산관련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하였음.

가. 은퇴가구의 소비

- 최근 소비 관련 연구는 생애주기모형을 확대하여 소비와 저축에 미치는 다른 요소들 즉, 미래 소득 및 수명에 대한 불확실성, 유동성 제약, 유증동기 등을 포함함.
 - 동 연구들은 기본적인 생애주기모형에 이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추가되어도 생애주기가설의 예측은 일정부분 유효하다는 주장을 제기함.
 - 국내 실증연구들은 많은 경우 생애주기모형이 예측한 바와 같이 은퇴가 가계소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으나(안종범·전승훈 2005; 석장훈·장선구 2009; 전상민 2011), 일부 국내 연구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은 높지 않으나 은퇴가 가계소비지출을 일정부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함(윤재호·김현정 2010).

- 생애주기가설은 은퇴와 소비연구의 이론적 토대가 되고 있으며 동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은퇴를 고려하여 근로하는 기간 동안에 저축을 하고, 이를 활용하여 은퇴 후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설명함.
 - 반면, 은퇴소비퍼즐은 생애주기가설의 예측과 상이하게 은퇴 후 소비수준이 은퇴 이전에 비해 불연속적으로 감소한다고 주장함.
 - 은퇴소비퍼즐은 개인들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따라서 이를 가정하는 생애주기가설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함.
 - 은퇴소비퍼즐은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만 은퇴 전후 소득 감소 등 예상하지 못한 충격으로 인해 합리적 수준보다 더 감소한 결과일수도 있다는 반론도 제기함.

- 1990년대 후반부터 해외 가구자료를 분석한 연구들은 은퇴 후 소비수준이 은퇴 전에 비해 감소한다고 보고하면서 생애주기가설이 아닌 은퇴소비퍼즐을 지지하는 결과들을 제시함(Banks, Blundell and Tanner 1996; Smith 2006;

Haider and Sephens Jr. 2007).

- Banks, Blundell, and Tanner(1998)은 영국의 British Family Expenditure Survey 자료를 토대로 은퇴가구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은퇴 시 충격으로 인하여 가계소비지출이 감소한다고 분석함.
- Bernheim, Skinner and Weinberg(2001)은 미국 PSID 자료를 이용하여 은퇴가구가 비합리적으로 자산을 축적하고 이로 인하여 은퇴 후 소비수준도 감소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 Haider와 Stephens Jr.(2007)은 주관적인 은퇴기대가 은퇴결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추정할 경우 예상된 은퇴가 여전히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함.

■ 2000년대부터 가구패널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은 은퇴가 소비지출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일부 소비비목이나 계층에 한하여 은퇴 후 소비감소가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고하여 생애주기가설을 지지하고 있음(안중범 · 전승훈 2005; Hurd and Rohwedder 2008; 전상민 2011).

- 안중범 · 전승훈(2005)은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소비지출함수를 추정한 결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은퇴자가구의 소비수준이 비은퇴자가구의 소비수준에 비해 더 높다고 밝혔으며 Hurd and Rohwedder(2008)는 미국의 Consumption and Activity Mail Survey 자료를 분석하여 은퇴 후 소비감소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함.

■ 한편, 횡단면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연령과 세대효과를 고려하여 국내 패널자료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중 · 고령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비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 생애주기가설을 지지하고 있음.

- 남주하 · 이수희 · 김상봉(2004)의 연구에 따르면 세대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50세 이후에는 소비가 감소하는 반면 세대효과를 조정할 경

우, 소비가 전 생애에 걸쳐 증가하였고, 박대근·이창용(1997)의 연구에 따르면 모든 세대에서 공통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가 증가함.

- 전승훈(2005)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 은퇴 전후 소비변화가 파악이 되는 가구를 분석하여 은퇴 후 소비지출이 은퇴 전에 비해 오히려 높으며 실증분석을 통해 은퇴가 가계소비지출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결과를 보고함.

■ 최근 국내 패널자료를 분석한 연구들 가운데 은퇴소비패턴을 일부 지지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연구도 있음.

- 박시내·심규호(2010)는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연도별로 60세 이상 은퇴자와 비은퇴자의 소비지출을 비교한 결과 은퇴자의 소비지출이 비은퇴자에 비해 적고, 시간이 감에 따라 소비격차가 확대됨을 보고함.

- 윤재호·김현정(2010)은 패널기법을 사용하여 은퇴 전후 소비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은퇴디미변수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결과를 얻고 있으나 성향점수분석(propensity score analysis)인 처치효과기법(treatment effect)을 사용하여 가계의 소비지출변화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크게 유의하지는 않지만 은퇴소비패턴을 일정부분 지지하는 결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남.

– 은퇴 전후 소비행태 분석에 있어 핵심변수인 은퇴여부가 다른 설명변수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거나 소비의 오차항과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기에 은퇴효과가 제대로 측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이를 성향점수분석을 통해 수행하고 있으나 가계의 시간불변 이질성이 통제되지 못하고 있는 점, 조건부 평균독립성 가정에 의존하는 점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생애주기가설은 은퇴 후 가계소비지출의 유지 혹은 증가를 예측하고 있으나, 은퇴 후 가계소비지출의 감소가 나타나는

은퇴소비패즐이 관측되기도 하는 등 사용자료, 분석방법 등에 따라 각기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남.

○ 2000년대 이후 연구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항은 바로 은퇴한 가계의 특성과 가계소비의 비목에 따라 은퇴 후 가계소비지출 양상에 차이가 있다는 점임.

－ 식료품 등 가정 내 생산으로 대체가 용이하거나 교육비, 피복비 등 취업관련 품목의 경우 소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체 소비수준은 여가와 보완관계에 있는 문화비, 의료비 등의 영향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임.

○ 가계의 자산규모에 따라 은퇴 후 가계소비지출의 양상이 달라지는데 은퇴 소비패즐을 지지하는 선행연구들도 자산규모 최하위 계층은 은퇴 후 소비지출이 크게 감소하지만 자산규모가 큰 중상위계층은 은퇴 후 소비지출이 오히려 증가한다고 보고하였음(윤재호 · 김현정 2010; Hammermesh 1984; Hurd and Rohwedder 2008).

○ 또한 가구주의 은퇴시점도 은퇴효과의 차이를 야기하는 가계의 특성으로 제시되었음.

－ 안종범 · 전승훈(2004)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하여 조기은퇴자는 은퇴 후 기간이 지연은퇴자보다 상대적으로 길어 소득이 증가하였을 때의 소비증가폭이 지연은퇴자보다 작게 나타남.

○ 다음으로 소비비목 중에서는 식비가 은퇴 후 지출규모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음(Smith 2006; Bernheim, Skinner and Weinberg 2001; Fisher 2006).

－ 윤재호 · 김현정(2010)은 분석대상에 식비에 다른 소비비목이 추가됨으로써 은퇴효과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함.

－ 은퇴 유형에 따라 식비지출 변화에도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Smith(2006)에 따르면 식비지출을 분석한 결과, 비자발적 은퇴자의 식비지출은 은퇴 후 감소한 반면, 자발적 은퇴자의 식비지출은 감소하지 않았다고 보

고하였으며, 윤재호·김현정(2010)도 예상하지 못한 은퇴를 경험한 가계의 경우에 소비감소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설명함.

- 이러한 일련의 연구결과는 은퇴가 중·고령자 가계 소비에 대하여 일관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함.
 - 기존 연구 간 상이한 결과가 사용된 자료가 전체가구자료인지, 또는 중고령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자료의 종류가 횡단면 자료인지, 패널자료인지 그리고 중요 변수인 소비지출이 전체소비인지 식료품소비에 한정된 것인지, 은퇴 전후 소비를 어떻게 비교할 것인지, 추정방법은 무엇인지, 분석대상 기간에 따라 상이함.
 - 은퇴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계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은퇴와 보다 관련이 있는 중고령자 가구를 대상으로 은퇴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설문과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적정 추정기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소비항목을 대상으로 분석할 필요가 제기됨.

나. 은퇴가구의 자산보유 및 운용

- 은퇴 이후 가계의 재무건전성과 기존의 소비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하여 이전 생활단계에서 축적해 놓은 자산을 처분하여 가계지출에 소요되는 금액을 충당하거나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가족이나 사회에 경제적으로 의존할 가능성이 높게 됨.
 -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부양의식의 변화와 아울러 아직까지 공적연금 급여가 일반화되지 않은 우리 사회의 경우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써 자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됨.
 - 가계금융조사(2011) 결과에 따르면 가구의 연령별 자산은 고령기에 급속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순자산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50대에 가장 높은 평균 3억 2천 633만 원(중위수 1억 9천 32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

으며 이후 급속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주 연령대로 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금융자산 보유비중은 낮고 부동산 비중은 높음.

■ 은퇴 후 소비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은퇴 전후 자산 보유 및 운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많이 미흡한 실정임.

- 중·고령자 세대의 다양한 노후준비 방법에 대한 연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소득보장 내지 적정 자산 규모의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은퇴를 대비한 자산보유 및 운용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임(여운경 외 2005; 백은영 2008 등).

■ 중·고령자의 건강에 대한 우려와 인식이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관련 연구로는 Edwards(2007), Rosen and Wu(2004), Smith and Love(2007) 등이 있는데, 이들 연구는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건강과 자산선택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건강위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주관적인 건강상태, 질병력, 직접 지불한 의료비, 신체적인 활동장애 사항 등을 사용함.

- Edwards(2007)는 1993, 1995년 AHEAD(Assets and Health Dynamics among the Oldest Old)자료를 이용하여 건강위험으로 인해 은퇴자들이 좀 더 안전한 투자를 하고 있음을 보였음.

·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결과 건강위험이 은퇴 후 연령과 관련된 위험 금융자산 보유 기피현상의 약 20%를 설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남.

- HRS자료를 사용한 Rosen and Wu(2004)에서도 건강상태와 자산선택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즉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가계일수록 퇴직계좌, 위험자산 등을 보유할 확률이 낮고, 안전한 자산에 투자할 확률이 높다는 결론을 얻었음.

- 다른 일부 연구에서는 건강과 자산선택 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음.
 - Smith and Love(2007)의 경우 관찰되지 않는 가계의 특성 차이를 고려할 경우 기존의 연구에서 나타난 건강상태와 가계의 자산선택 간의 유의한 관계는 상당부분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NBS(New Beneficiary Survey)자료를 이용해 실증분석한 Fan and Zhao(2009)의 경우에도 OLS 분석결과와 패널모형 분석결과를 비교하였는데, 가계의 보이지 않는 특성을 고려할 경우 가계의 건강이 자산수준에 끼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으며, 건강이 가계의 자산구성에 미치는 영향도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당히 약화되는 것을 보였음.
- 은퇴 이후의 건강상태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고령화사회를 대비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구하고 있음.
- 손용진(2005)과 이승렬(2007)은 개인의 건강과 은퇴 간 관계를 분석하고 있는데 은퇴로 인해 개인들의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특히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우 은퇴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며 건강문제로 인해 은퇴한 중·고령자의 경우 건강플로우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건강자산도 줄고 있음을 보여주었음.
 - 석상훈(2010)은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중고령자의 은퇴와 건강상태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은퇴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함.
- 한편, 은퇴에 대비한 자산의 적정성 또는 가계의 은퇴준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은퇴가계의 자산규모와 은퇴 이후의 소비수준을 추정한 후 이들을 비교하여 판단함.
- 은퇴 후 소비에 충당할 순자산을 마련하기 위한 저축률을 추정함(Duncan, Mitchell and Morgan 1984; Burns and Widdows 1988).

- 생애주기모형을 사용하여 대표가구의 자산의 기대분포를 추정하거나, 분포를 이용하여 가구특성별 자산축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시도함 (Engen, Gale, and Uccello 1999; Scholz, Seshardri, and Khitatrakun 2006).
- 국내의 경우 은퇴 후 필요소득수준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에 초점을 맞춘 연구와 은퇴 후 소득수준이 은퇴 후 필요소득수준을 충족하는데 충분한가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은퇴자산의 근간을 이루는 공적연금 자산의 충분성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음(여운경·김진호 2007; 강성호·전승훈·임병인 2009; 권택호 2010).
 - 여운경·김진호(2007)의 분석결과 우리나라 가계의 은퇴자산은 적절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공적연금의 특성을 분석 모형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강성호·전승훈·임병인(2009)의 분석결과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은퇴 후 소비수준 예상액의 약 60%를 충족함.
 - 권택호(2010)는 가구주의 나이가 많고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주택자산을 은퇴 후 생활비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 은퇴설계의 적정성이 크게 낮아진다고 보고함.

3. 기존연구와의 차이점

- 국내외 연구들이 대부분 이론적인 분석에 국한되거나 은퇴 관련 주요 이슈를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동일 가구의 은퇴 전후 소비 변화, 유동성 제약 효과 그리고 자산구성 변화, 건강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중·고령자 가구의 예비적 자산구성행태 등의 분석을 토대로 은퇴에 대한 보다 다양한 분석을 하나의 일관된 분석 체계 내에서 시도함.
 - 기존 연구들 중 많은 경우 소비차원에서는 총소비 변화만을 살펴봄(남주하·이수희·김상봉 2004; 박대근·이창용 1997; 박시내·심규호 2010; 전승훈 2005 등).

- 은퇴 후 가계소비지출변화를 소비비목별, 가구 자산분위별로 분석하였지만 횡단면자료를 이용, 동일가구의 은퇴 전후 변화를 측정하지 못하고 있음(윤재호 · 김현정 2010).
- 은퇴결정과정 에 대한 연구로 국한됨(황명진 2010; 손종철 2010).
- 중 · 고령자들의 자산격차 추이와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으나 은퇴더미의 내생성을 고려치 못하는 한계가 있음(석상훈 2011).

■ 한편, 분석자료에 있어서도 은퇴가 가계소비지출 및 자산보유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횡단면자료는 물론 패널자료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국내 가구자료를 이용한 연구들은 조사연도별로 상이한 측정문항과 다수의 결측치 발생 등 해당 패널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특정 조사연도의 횡단면자료를 이용한 경우가 많음(남주하 · 이수희 · 김상봉 2004; 윤재호 · 김현정 2010).
- 동일한 은퇴가구의 은퇴 전후를 비교 분석한 연구의 경우에는 중 · 고령층 가구가 아닌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한 패널자료에서 은퇴가구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은퇴가구를 임의로 가정하고 결측치가 많아서 실제 분석에 이용된 표본의 수가 적다는 단점이 있음(안종범 · 전승훈 2005; 전승훈 2005, 전상민 2011).
- 본 연구에서는 중 · 고령가구에 대한 횡단면 분석을 통해 이들 가구의 경제 · 사회적 특징을 파악하고 은퇴설문을 토대로 은퇴가구의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이들의 행태를 분석함.
 - 은퇴 전후의 소비 및 자산보유 행태를 분석함에 있어 기술분석(descriptive analysis)은 물론 기존 연구에서 간과해 왔던 가계의 이질성(heterogeneity)과 은퇴결정의 내생성(endogeneity)을 감안한 다양한 실증분석(IV, Panel IV) 기법을 적용하여 강건한(robust) 분석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함.

- 중·고령자 가구들의 건강위험과 자산선택 결정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자산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분석함.